

국민청원 5만명... 車 급발진 '입증 책임' 제조사로 바뀔까

'도현이법' 국회 결실 관심

현행은 피해자가 '결함 증명' 원칙 허영·권성동 의원 등 관련법 발의 법 추진엔 산업계 부담·반발 예상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故)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서 종료됨에 따라, 차량 급발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사고 의심 건수는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 주장 차량이 도보에서 있던 행인 9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발진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모습.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면서 국가가 관련 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시스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등의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담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

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는 소의 제기 전까지 결함과 관련한 내부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내부 직원들의 법정외의 신문과 녹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에 유럽연합 수준의 EDR(사고기

록장치)를 장착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22대 국회에선 급발진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청원 내용과 가장 비슷한 법안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허영 의원은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른바 '도현이법'에서 담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되면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

의했으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낸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EU는 피해자의 자료 요청권을 강화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건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자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 방향 논의에 앞서 그 산업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검토도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1면 '中 견제, 韓 배터리...'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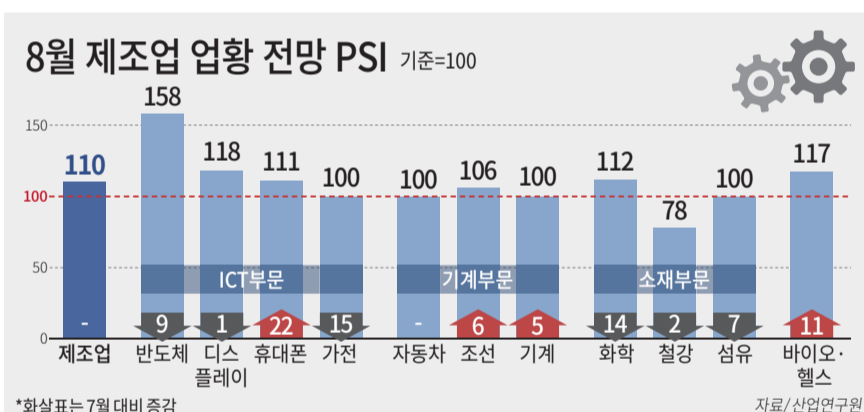
반도체·조선 등 주도... 내달 제조업 경기 '긍정적'

산업연구원, 8월 업황 전망 PSI 7월 110기록, 8개월째 기준치 상회 내수 107 상승전환, 수출 119 유지

반도체 업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8월 제조업 경기도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조선, 화학, 바이오·헬스 업종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철강 업종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국내 주요 업종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191개 업종에 대해 7월 8일 ~ 12일까지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PSI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변환돼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



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한다.

8월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과 동일한 110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내수(107)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수출(119) 역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생산(110)이 3개월 연속 하락하

면서 둔화가 예상된다.

업종 유형별 8월 전망 PSI는 ICT(정보통신기술, 124) 부문이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기계(102) 부문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소재 부문(100)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에 그치는 수준이다.

세부 업종별 8월 전망 PSI는 반도체

(158)가 전월(167)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돌며 업황 개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118), 휴대폰(111), 조선(106), 화학(112), 바이오·헬스(117) 등 업종이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철강(78) 업종만 유일하게 기준치에 크게 뒤처지며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

한편, 7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113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로도 상승 전환했다. 내수(108)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출(120) 역시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는 데다, 생산(119)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업종 유형별 7월 현황 PSI는 ICT(131) 부문과 소재(105) 부문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나, 기계(95) 부문은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철강업계

中 '덤핑' 공세 강화 국내 가격하락 우려

관세가 확대되면 반도체업계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 2017년 70.2% 이후 하락 추세이지만 지난해 기준 55.4%로 여전히 압도적 1위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담이 커지면 중국산 IT 기기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국내 주요 기업들이 만드는 중간재인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중국 배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바도 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이 낸드플래시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철강업계는 관세 폭탄 영향으로 중국의 '덤핑' 공세가 강화할 것이라는 걱정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 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국내 철강사에 대한 가격 하락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조선업계는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유력하다. 화석연료 등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제조업 부흥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액화석유가스(LPG)선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CJ라이브시티, AEG 투자유치 등 사업의지 분명

>> 1면 '경기도, 7800억 투자...'서 계속

지난 해 4월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아레나 건축 설계 및 시설, 활용 계획 등 실질적인 운영 기획을 진행해왔고, 최근까지도 CJ라이브시티와 아레나 JV(합작법인) 설립 및 고양시 내 한국 사무소 개설도 준비 중이었다.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란 평가다.

경기도는 사업협약 해제의 원인이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전채 투자비 약 2조원 중 약 40%에 달하

는 7800억원의 비용이 투자됐다. 토지 매수비 및 내년도 토지 대부료도 모두 완납한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의 CP(기업어음)를 발행했고, ENM 신용평가등급 역시 A1으로 우량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투자 의향을 밝힌 총 5개의 대형 금융투자기관 역시 PF조정위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전제로 PF 실행을 앞두고 있었다.

아레나가 조성되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전력 공급 불가로 개발이 안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8

년간 3%의 공정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아레나를 앵커시설로 하는 현재의 사업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이후로 사업은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계획된 공기는 총 36개월로 2021년 10월 착공 후 한전의 전력공급 불가 통보가 불가항력적 대의 변수로 문제가 되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7%의 공정률로 공사는 1년 반 동안 순탄하게 진행됐다.

CJ라이브시티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사업 계획 변경의 일환인 사업기간 연장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 온 가운데, 경기도는 사업 만료를 2주 앞당기고 돌

연 사업기간 연장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전력 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조건 아래 아레나 공사의 재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수백억원 대의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등이 골자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상호간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기간 연장을 거듭 건의 ▲사업 정상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기간 경과'가 아닌 '사업 지연/사업 추진 실적 저조'를 사유로 내세우며 사업 기간 만료일 경과에 앞서 6월 28일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또 사업 해제의 귀책을 CJ라이브시티로 내세우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차현정 기자 hyeon@